

중동 위기 장기화... 정부, 나프타 확보·선박 안전 총력 대응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3국 순방
선박 26척 선원 안전·통과방안 협의
'신호등 시스템', 핵심품목 수급관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동 지역에서 원유 등을 확보하기 위해 7일 오후 출국해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을 방문한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상황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략경제 협력 대통령 특사로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국내 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원유, 나프타 추가 확보와 관련된 협의를 위해 오늘 저녁 출국해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와 2400만배럴을 최우선 공급받기로 했고, 실제 (UAE에서) 출발한 원유, 나프타가 순차적으로 도착하고 있다"며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온 원유가 61%인 상황에서 중동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 대체 공급선 확보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에너지 불안' 상태의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UAE에서 2400만배럴을 확보한 것은 단기적인 불안함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장기 수급에 대비



강훈식 비서실장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 1배럴의 원유라도, 단 1톤(t)의 나프타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원유 수급 상황에 대해선 "원유 수급은 (지난해 대비) 4월 약 59%, 5월 약 69% 수준까지 확보된 상태이며 추가 확보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한두 달 사이에는 큰 일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납사) 수급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나프타는 물량이 제일 급선무"라며 "이번 추경에 가격 보조를 50%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 4800억원

반영돼 있는데 정유사와 국회의 소통 과정에서 그 비율을 더 높여주자는 여

당의 제안도 있었다. 가격이 높아지면 정책금융도 있고, 세금 유예도 있고 다른 정책 수단으로 피해를 분담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하고 안되는 것은 예비비로, 추가로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수급 불안이 지적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제품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제조 업체에 원료인 나프타, 플라스틱 수지 등을 우선 공급하고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 근절하기 위해 사재기 방지 신고센터 운영, 도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지도를 적극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프타뿐 아니라 다른 에너지 품목들도 철저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강 실장은 "요소수, 페인트, 종량제 봉투 등 핵심 품목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실시간 살펴보고 있다"며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유통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대체 공급선과 규제 완화 방안이 무엇인지 필요한 조치를 신속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헬륨의 역시 중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반도체 업계로부터 4개월 정도 분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번에 확보한 4개월분을 고려하면) 업계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이후에 대체 수입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헬륨은 미국산(産)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정부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한국 국적 선박 26척과 관련해서는 통과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합당한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전제 아래, 선사의 입장과 국제적 협력 구도를 고려해 안전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선원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매일 체크하고 있다. 그분들로서는 배 안에 갇혀 있으니 답답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배 안에 2주 정도의 식량이 비치돼 있고, 4주 치 의료품도 확보돼 있다. 하선을 원하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외교부 현지 공관에서 승하선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관련 선박 등이 해협을 통과한 데 대해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배는 2000척이 넘고, 80척 정도가 나오고 50척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마치 '일본은 하는데 한국은 뭐하냐'는 얘기도 있는데, (해당 선박은) 일본 이름이 붙어있지만 사실 인도 배다. 수많은 배가 오고 가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국가 간 경쟁 체제로 만드는 것은 국익을 위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26조 추경 공방... 여야, 재정방향 놓고 충돌

與, 경제 위기 대응 위한 추경 강조
野, 지방선거용 '선심성 예산' 비판

여야가 7일 국회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6조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 예산(추경)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쟁의 불확실성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 ▲민생 안정(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9조7000억원) ▲국채 상환(1조원) 등이 담겼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민생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며 "지금 이 위기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안 시정 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28번 반복했다"며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중동 전쟁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이 마중물이 돼 민생경제의 방파제를 세우고 활맥을 뚫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지원 항목을 거론하며 "보증금 피해로 주거 기반을 잃은 피해자들이 고유가, 고물가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임차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역대 정부 통틀어서 유례가 없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 나온 문화관광 지원 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에는 "(경제가 어려우

면) 국민이 가장 먼저 줄이는 소비가 영화, 관광, 숙박, 문화소비"라며 "정부가 취약 산업을 지원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3892억원 가량을 편성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 역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야당에서 이번 추경을 두고 지방선거 대비 대표용 추경이라고 날 선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며 "이 추경이 선거용으로 보이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5월13일 당시 윤석열 정부가 초과세수 53조로 만든 59.4조원짜리 역대급 규모 추경안을 국회로 제출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당장 지방선거 표심을 얻기 위해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돈을 나눠줘야겠다"라며 "미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래세대의 빚을 우리가 다시 늘리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중동의 에너지 위기로 시작된 추경의 우선순위는 에너지 대책이 돼야 한다"며 "원유가 막히면 반도체도 막힌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은 "이번 정부 추경안을 보면 '잘 쓴다'는 생각보다 '막 쓴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세청 체납관리단, 영화산업 제작 지원 등 예산은 과감하게 전액 삭감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운송업자와 농어민들을 우

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17개 시도의 모든 지자체가 20%의 지방세를 부담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라고 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 지역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 "지방 선거용으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농업용 유류나 무기질 비료 등 실제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국민의힘, 경기·전북지사 후보 추가 공모

역량 있는 후보 내세우기 위한 판단
부천시장에 박내경 우선 추천
강릉은 한국시리즈 방식 경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7일 6·3 지방선거에 나설 경기지사와 전북지사 후보를 추가 공모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앞서 경기지사 후보 공모에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 2인만 등록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공관위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 추가 공모가 필요하다는 판단

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할 때 역량 있는 인재들에게 경쟁의 문을 더욱 폭넓게 열어주고, 치열하고 건전한 경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사전 교감이 있는 경기지사 후보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없었

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후보가 두 명인데, 만에 하나 경선을 하면 포기하고 사퇴할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 당내 경선을 역동성을 가지게 하고, 본선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추가 공모자가 없으면 기존 예비후보 2명이 경선을 하는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경선으로 (한다)"며 "마지막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공관위는 이날 부천시장 후보로 박내경 부천갑 당협위원장을 우선 추천했다. 강릉시장 경선은 한국시리즈 방식을 도입한다. 권혁열·김동기·심영삼·최익순 예비후보가 예비경선을 치른 뒤 1위 후보자를 뽑고, 현역인 김홍규 강릉시장과 본경선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후보자 접수가 없었던 전북 지역에 대한 추가 공모도 실시하기로 했다.

/박경수 인턴기자